

소상공인·중소기업서 대기업, 금융시장까지 '유동성 대방류'

# 中企에 58조... P-CBO 등 18조... 단기자금시장 7조

**분야별 자금지원 대책**

정부가 기업과 금융시장에 100조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투입한다. 코로나19 위기에 처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안간힘이다. 중소기업·자영업자를 위해 58조 규모의 대출 보증에 나서고, 기업어음(CP) 등 단기자금 시장에 7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24일 "시장 불확실성이 큰 만큼 초기 단계에 대규모로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에 58조 투입**

정부는 우선 기업자금 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29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29조 규모의 자금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업·기업·수출입 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동원해 29조원1000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설명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소·중견기업 지원규모는 총 21조2000억원이다. 산업은행이 5조원, 기업은행 10조원, 수출입은행이 6조2000억원을 책임진다. 대상은 경기위축, 수출입 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국내 중소·중견기

중소기업에 기존 지원금 29조에 정책금융기관 동원 29.1조 추가 증권사 5조, 韓銀 RP 매수 2.5조 전자단기사채 차환 등에 2조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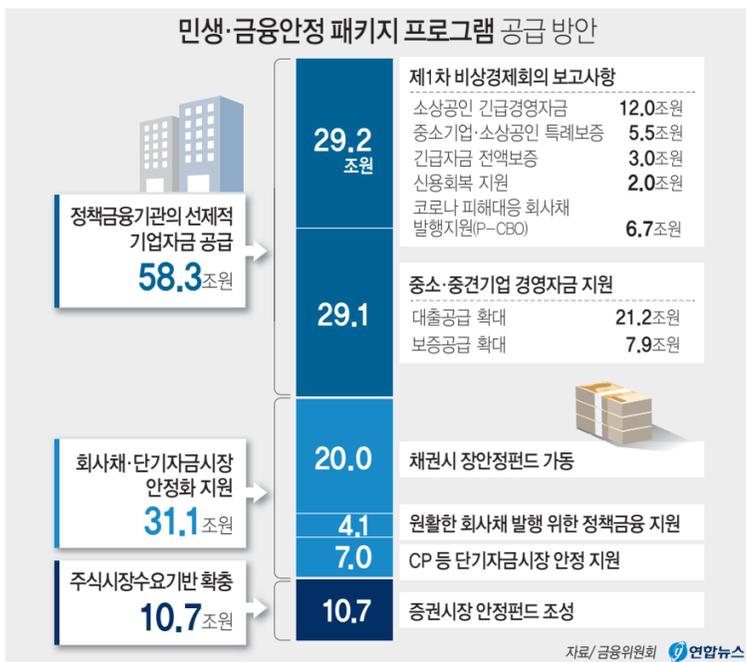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시장 복원력 회복때 까지 기업에 버틸수 있는 자금 지원"

업이다. 매출 감소 등에 따른 긴급 경영 자금, 원자재 수급불안 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요자금, 기타 단기 유동성 어려움 해소를 위한 운전자금 지원한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 5조4000억원, 수은 2조5000억원 등 7조9000억원은 신용취약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에 사용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이 복원력을 발휘해 회복될 동안 기업에게 버틸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정책금융기관은 단기적으로 임계점 수준까지 정책금융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고 민간 금융사도 대출 만기연장 등 기업자금에 대한 완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CP 등 단기자금시장에 7조원 공급**

정부는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 등 단기자금시장의 불안요인이 완화될 수 있도록 7조원 가량의 자금을 공급한다. 우선 증권사에 5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자체 자원(MMF 등)을 통한 대출 1조원에 더해 투자자 예약금 재원

을 활용한 대출 1조 5000억원 등 증권금융 대출에 약 2조5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한국은행 환매조건부채권(RP) 매수에 2조5000억원을 공급한다. 한은 RP 증권사 범위도 현재 은행 17개, 증권사 4개에서 국고채 전문딜러로 확대한

다. 한은은 증권금융과 증권사에 RP를 통해 자금을 공급한다.

나머지 2조원은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기업CP, 전자단기사채 차환 지원에 사용한다. 우량기업 시장성 차입은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통해 지원하되 채안펀드 지원 전이라도 산업·기업은행을 통해 2조원을 먼저 매입토록 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CP, 전자단기사채 등 일부 단기자금시장에서 거래가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위해서는 필요한 단기자금을 적시에 조달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대기업도 경영안정자금 사용**

이날 정부가 내놓은 금융지원 가운데 경영안정자금은 대기업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쓰러지는 대기업이 없도록 하겠다는 포석이다. 정부는 유동성 위기에 봉착한 기업을 돕기 위해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보증권(CBO)과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통해 17조8000억원을 공급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충격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나누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기획재정부 안일환 예산실장이 지난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배경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안도걸 예산총괄심의관. /연합뉴스

## 내년 韓 살림살이 550조 넘어서나 '경제 역동성 회복' 초점 예산편성

**예산안·운용계획안 지침 의결·확정**

문재인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경제 역동성 회복'에 맞춰 편성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한국 경제가 위축된 상황을 고려한 행보로 보인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 견지', '재정 혁신으로 재정건전성 기반 마련'이라는 기본 방향에 맞춰 준비한 2021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 경제 역동성을 회복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으로 포용성장 성과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은 ▲경제 역동성 회복 ▲미래 성장동력 확충 ▲사회안전망 보강 ▲감염병 등 사회재난대응체계 고도화 등 4대 중점 투자 방향에 맞춰

**편성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내년 예산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재기와 혁신을 지원한다. 맞춤형 투자로 지역 경제 활력도 제고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관광 업계가 어려워진 데 대해서는 한류 기반 글로벌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이 위축된 데 대한 안전망 확충과 감염병 등 사회재난대응체계도 고도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감염병 전문병원과 인력 확충 사업, 마스크 등 보건물자비축, 백신·치료제 R&D 확대 등 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 만큼 재정건전성은 올해보다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는 546조8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 "6개월 후 까지 내다보고 과감하게 지원"

**은성수 금융위원장 일문일답**

"지원기간 늘려 지원규모 확대돼 대기업, 자구노력 전제 자금공급"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며 지원규모대상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서 대기업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대기업은 우선 기업어음(CP), 회사채 시장에 나와 해결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며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자구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일문일답**

—증권시장안정펀드와 관련해 4월 초 1차 캐피탈콜(Capital Call)을 진행한다고 했다. 만약에 증시가 더 하락해 2차 캐피탈콜이 진행되야 한다고 하면 그 시점은 언제라고 보나. 10조원을 다 소진한 경우 추가 대책은 마련돼 있나.

"당장 2차 캐피탈콜 시기를 지정할 순 없다. 그 부분은 시장전문가들이 판단했을때 가장 유용하고 필요한 시점에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에서 출자를 받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주어진 범위(10조7000억원) 안에서 해결할 계획이다."

—지원규모가 100조원+알파(α)이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했을 때 2배 수준이다. 그 만큼 위중하다는 의미로 보면 되나.

"이번 금융위기는 지난 2008년 금융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기와는 달리 실물부분에서 시작됐다. 코로나19확산으로 소비·생산·투자 활동이 둔화되고 국제교역이 감소하는 등 실물부분에서 급격한 위축이 시작됐다는 의미다. 다만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하자면 1997년 당시 A기업을 안정시키면 B기업이 나오고 B기업을 안정시키면 C기업이 나와 지원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에는 6개월 내에 일어날 일을 한번에 모아 살펴봤다. 당장 다음 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6개월 뒤를 보고 과감하게 지원해나야 어려움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위중해서가 아니라 지원기간을 6개월로 늘려 지원규모가 확대됐다고 보면 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자금 지원시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발급이 오래걸린다는 지적도 있지만, 신용도가 낮아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경우 정말 어려운 사람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신용도가 있는 분은 지역신보에서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은행에서 자금공급이 가능하지만 신용도가 낮은 분들은 자금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신용등급 5~7등급) 소상공인진흥회에서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소액일 경우에는 패스트트랙으로 선지원한다. 다만 지난주 기준 코로나19 피해기업의 자금 신청 수가 21만건이었다. 모두 지원이 불가능하다. 금융감독원과 협의 를 통해 금융민원센터를 열 계획이다. 자금공급이 어려운 분들이 신청하면 은행의 설명을 듣고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자금 공급 범위가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확대됐다. 다만 대기업에 대해선 자구노력을 전제로 자금을 공급한다고 했는데 무슨 의미인가.

"대기업의 경우 충분히 자구노력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다만 일시적인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국민이 납득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100만원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기업에 500~1000억원을 지원한다고 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 예컨대 지원 금액 중 10%를 상환하고 90% 만기 연장을 받는다는 등 중소기업과는 다른 자구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나누리 기자